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2021-9
(2021.5.7.)

중국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 전격 취소: 민영 대기업 제재와 중국 경제정치의 본질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차례

핵심요약

Ⅰ. 중국 앤트그룹 상장 중단 관련 쟁점 사항
Ⅱ.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 경제와 정치의 타협
Ⅲ.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국유기업
Ⅳ. 민영 대기업의 속성: 정부와의 이해 공유
Ⅴ. 개인 기업 앤트그룹 사태의 본질
Ⅵ. 앤트그룹 사태와 중국경제정치에 대한 재인식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① 2020년 11월 3일 마윈(馬雲)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 전격 취소

- 처음에는 마윈 회장의 정부 비판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내부의 권력투쟁이 상장 취소의 원인이라는 주장 제기; 최근에는 중국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특징이 위와 같은 전격적인 결단의 이유로 등장

② 중국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은 나름 사회주의 계획과 시장 간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음

- 대표적인 것이 1982년 확정된 계획이 주이며 시장은 보조라는 이른바 주보론(主補論)

-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이라고도 불림: 경제 활성화와 운영을 새와 새장에 비유,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인 계획이라는 큰 지도하에서 개인의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 1994년 확정된 조대방소(抓大放小) 역시 대단히 중요한 원칙: 대형 국유기업은 국가의 집중 관리 하에 두고, 규모는 더욱 키워서 경쟁력 있게 양성(抓大); 즉 대형기업에 대한 중국공산당 지배의 원칙

③ 사태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오래전 대기업과 시장에 대한 원칙을 확정했고 그것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 새장을 넘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항시 제제 가능, 따라서 향후 앤트그룹과 비슷한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큼

1. 중국 앤트그룹 상장 중단 관련 쟁점 사항

○ 2020년 11월 3일 마윈(馬雲) 회장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샹하이 및 홍콩 증시 상장[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이 예정일인 11월 5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취소됨

○ 상장 규모는 주식 상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40억 달러였고, 그와 같은 전격적인 상장 취소 또한 전례가 없어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짐

○ 샹하이 증권거래소와 관련 중국 당국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음

○ 다음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

-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마윈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경제 및 금융정책을 비판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중국정부의 앤트 그룹 상장 금지 결정이라는 전언

-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다...” 이상이 마윈 회장의 공개 발언

- 중국 금융시스템의 낙후성, 당국 금융 관리의 비효율성, 그리고 당국 및 금융기업의 개혁 의지 부족 등을 지적하며 중국 금융 현실을 처음으로 비판

- 중국에서는 금기 시되는 당국과 정책 대한 정면 비판이 정부를 자극했고, 그 결과 상장 중단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

○ 그 후 전문가들의 또 다른 분석이 제기되면서 앤트그룹 상장 금지 사건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음

- 특히 앤트그룹과 다른 민간 대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간섭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가 논의의 주제로 부상

-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식 경제체제와 대기업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민영 대기업은 중국경제에서 존립과 번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

○ 이상의 논의는 중국경제의 기본 구도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앤트 그룹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

2.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의 접목: 경제와 정치의 타협

가. 중국경제의 역사적 부침

○ 주자파로 대변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사고는 극좌파의 상징인 절대권력자 마오쩌둥 시절부터 표출되기 시작

○ 1958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주도한 공산화 및 경제개발 계획인 대약진운동이 1959-1962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실패하자, 생산성을 중시하는 류샤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이 약진하게 되고, 그 결과 실용주의 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중국경제는 급속히 회복(이것이 최초의 중국식 실용주의 노선)

○ 경제회복의 주역들은 후일 자본주의 요소가 가미된 인간들을 의미하는 주자파(走資派)라고 불리는데,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널리 회자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 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1962년 7월 처음 등장

○ 그 후 마오가 주도한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가시화되면서 주자파는 몰락했고, 마오의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다음에야 주자파의 재집권 기회 도래

나. 개혁개방의 지향점

○ 1978년 12월 13일 공산당 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 직전 소집된 공산당 중앙공작회의(사안의 사전 조율 회의) 폐막 집회에서 덩샤

오핑은 유명한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 일치단결하여 미래를 향해 보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개혁개방을 천명

- 다음은 덩샤오핑 연설의 핵심 내용: “우리나라 경제관리체제에는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권력을 마땅히 계획성 있게 하방하여야 한다.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공장기업, 광산기업, 그리고 생산대대의 자주권을 확대하여 공장 하나 하나와 생산대대가 각각 천방백계(千方百計)적으로 능동적인 창조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일부 기업, 일부 노동자 농민이 열심히 노력하여 실적이 오르는 경우,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는 자본주의 요소, 즉 시장원리와 경제 자율권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국경제와 관련 지속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음; 이 글의 핵심 논제인 앤트그룹 사태와도 연계

○ 아무튼 위의 연설 내용과 같이 이른바 ‘하방,’ 즉 기업, 개인 등 경제 각 주체의 자율권 확대가 정해진 후, 가시적인 하방(권한 이양)이 이루어지면서 시장경제 도입이 가속화됨

- 1979년 7월 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통해 중국경제의 하방 속도와 정도를 알 수 있음: 중국과 외국자본이 합해진 합자기업(合資企業), 외국자본만으로 설립되는 독자기업(獨資企業), 그리고 자본 출자와 상관없이 계약에 의한 기업 간 제휴로 탄생하는 합작기업(合作企業) 등 세 가지 형태의 기업활동이 보장됐고, 국영기업의 자율권 확대, 이윤 유보, 그리고 고정자산제 등도 함께 실시

-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획기적인 기업 자율화 조치가 취해진 셈인데, 당시 확정된 원칙은 지금도 중국경제의 기본 골격으로 남아 있음

- 1980년 이후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입출을 위해 5개 경제특구(經濟特區)가 신설됐고, 1988년 ‘대만동포 투자장려 규정’ 및 1990년 ‘홍콩, 마카오 화교동포의 투자 촉진 규정’ 등이 제정되면서 국내 하방 정책은 본격적으로 국제화의 길을 걷게 됨(이후 외국인의 대중 투자 급증)

다. 개혁개방의 딜레마: 시장경제의 범위

○ 시장원리, 특히 개인의 자율권은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하방이라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지만 하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부가 확정됐을 뿐 그 이상의 논의는 없었음

○ 그 결과 중국 사회 전체가 불안에 휩싸이게 되자 중국지도부는 이에 대한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중국경제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제한적 시장 원칙인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

- 1982년 당시 최고 경제전문가 천윈(陳雲)은 향후 중국경제가 지켜야 할 시장경제 원칙을 다음과 같이 피력

- “경제 활성화와 운영을 새와 새장에 비유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인 계획이라는 큰 지도하에서 개인 경제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 1982년에 열린 당 12기 전국대표대회에서 ‘계획경제 주(主), 시장조절 보(補),’ 즉 주보론(主補論)으로 공식화된 후 천윈에 의해 상기의 조롱경제론으로 재해석됨

- 천윈의 조롱경제론은 그 후 개혁 과정에서 보수파 논리의 골간이 되었고, 시장경제 요소는 새이지만 그것이 새장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됨; 즉 중국경제의 근간이 사회주의임을 확실히 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음

○ 하지만 개혁개방이 심화되고 경제가 가시적으로 팽창하면서 위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자 중국은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됨

- 조롱경제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자오쯔양(趙紫陽)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다음과 같은 시장우위론

- “새장으로부터 새를 풀어주고 새가 다시 새장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면 된다는 것” 이 자오의 주장; 그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실각하기 1년 전인 제13기 사중전회(四中全會)에서 채택된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이 기업을 이끄는 시스템’ 을 의미하는바, 그의 주장은 시장 우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을 지향

○ 중요한 것은 현재 앤트그룹 사태를 통해 다시 불거진 기업의 확장 범위와 자율성 정도에 대한 논쟁이 1980년대 후반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

○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통해 자오쯔양 등 시장중시론자들이 실각함으로써 시장의 제한적 운영을 의미하는 조롱경제론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음

3.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대형 국유기업

가. 중국의 기업 원칙: 조대방소(抓大放小)

○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에도 유효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 확립되면서 조롱경제론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됨

○ 1990년대 들어서 중국경제가 급성장하자 기업 규모 역시 가시적으로 커졌고, 중국정부는 이에 맞춰 1994년 처음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조대방소(抓大放小)

- 조대방소는 “큰 것은 붙잡고 작은 것은 놓아 준다” 는 의미

- 대형 국유기업은 국가의 집중 관리 하에 두고, 규모는 더욱 키워서 경쟁력 있게 양성(抓大)

- 이 방침이 정해진 후 국유기업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됐고, 그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탄생

- 반면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개혁, 즉 민영화를 추진; 주식합작, 개조, 연합, 임대, 매각, 위탁경영, 파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개혁을 진행(放小)

○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원리를 적극 적용, 기업 구조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므로 기업 민영화의 원칙이 확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경제는 대형기업 중심으로 재편됐고, 대형기업은 곧 국유기업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으로써 중국경제와 기업들 모두가 초대형 국유기업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상황이 전개됨

- 정책 담당자들은 거대한 중앙통제 기업들에게 관심을 집중했고, 이들을 더욱 거대하게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막대한 정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 및 경제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이상의 원칙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외형상 거대해진 민영 대형기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셈

- 비슷한 맥락에서 민영 앤트그룹에 대한 정부 영향력 행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원칙인 방소(放小)는 중소기업 운영상 시장원리의 확대, 특히 기업의 민영화 촉진으로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다음의 현상이 발생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 분야 관련 공산당 혹은 국유기업 간부들이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기업 사장이 애초부터 공산당원인 경우가 다수

- 기업 중 상당 부분을 민영화하거나 파산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게 됨으로써 지방 수준의 정부-기업 결탁이 심화됨

나. 주식제 전환과 국영 대기업의 독점력

○ 1990년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업 규모 역시 커지자 1993년 기업과 주식 관계를 정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이 확립됨

- 1993년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이 이루어면서 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주체를 다변화하는 정책이 채택됨: 즉 회사의 '주식제 전환 조치'

- 기업의 급팽창으로 기업 자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기업의 주식 발행을 적극 장려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 주체가 주식을 구매하는 일반인으로 확대됐음을 의미

- 여기서 다음의 질문이 이어짐: '주식을 취득한 자는 보유 주식 수량만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가?'

-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주식제는 소유제의 유형이 아니라 일종의 자본조직 혹은 기업조직의 형식이라는 입장을 피력

○ 결국 기업의 자본 수요 충족을 위해 주식제를 실시하지만 주식 보유자에게 기업 소유를 의미하는 주주권 행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같은 맥락에서 주식회사의 경영 및 운영 주체인 이사회와 같은 조직은 외형상 존재하나, 이것 역시 절대적인 주주권 행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

○ 이상의 논의가 보여주듯 중국경제에서 대형 국유기업의 위상은 절대적인데, 석유, 전력, 철도, 우정, 항공, 통신, 천연가스 등 이른바 7대 전략산업 분야는 지금도 국유기업이 독점

- 2017년 기준 국유기업 매출액은 52.2조 위안으로 중국 GDP 대비 무려 63.1%

- 중앙기업(중앙정부 관할) 매출액은 30.8조 위안,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는 21.4조 위안

- 위의 7대 전략산업 외에 석유화학/화학섬유 분야의 국유기업 비중 역시 약 70%로 대단히 높고, 자동차 72%, 석탄 70%, 금융 90%, 국방산업 100% 등을 기록[1)]

4. 민영 대기업의 속성: 정부와의 이해 공유

가. 권력과 기업의 접목

○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이 소유 운영하는 업체이므로 공산당은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 권력 외에 국가 부의 절대 지분을 지니고 있는 셈

○ 바로 이것이 중국식 정경 유착의 기반

- 앞의 설명이 보여주듯 철벽의 진입장벽과 정부의 보조금 혹은 그 밖의 특혜 덕분에 가능해진 국유기업의 독점력은 국유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렌트(rent: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이윤) 추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며,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공산당의 경제 권력을 의미

- 중국식 국가 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료, 군부, 핵심 공산당원 그리고 사업가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대한 기업의 자금과 조직이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것이 중국식 정실주의의 특징이고, 같은 맥락에

1) 박선경(상해지부 부장), “중국 독점산업 현황 분석,” 한국무역협회 「KITA Market Report」 2019년 1월 15일.

서 국유기업은 공산당 지배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남

- 다시 말해 정권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실주의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지는 렌트가 필요하고 그 렌트가 지지자들에게 분배된다는 의미

○ 이상의 논의를 통해 덩샤오핑부터 후진타오(胡錦濤)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된 민간 영역의 확대, 특히 민영기업의 약진으로 대변되는 민진국퇴(民進國退)가 시진핑의 주석 취임 이후 반대 개념인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전환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민영 대기업의 약진이 계속되면 국유기업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방대한 친공산당 세력들에 대한 경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공산당 지배력의 약화가 현실화될 가능성 상존

- 논리상 어느 수준 그리고 시점에서는 민간 부분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중국식 정경유착이 정점에 이른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음

-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공산당원이 아닌 기업인들을 처음으로 공산당에 입당시켰음

- 공산당과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원래부터 중국 기업인들은 서구와는 달리 자신들의 집단 이해(corporate group interest)를 추구하지 않고 사업에만 충실했지만, 위의 조치 이후 기업가들은 공산당과 이해를 함께 하는 집단으로 변모하게 됨

- 공산당과 기업가가 함께 기득권 수호자 역할을 나누어 짊어지는 모습이 가시화되면서, 특히 민영 대기업의 이해는 공산당의 그것에 더욱 수렴됨

- 여기서 중국식 정경유착, 즉 기업과 정부, 혹은 공산당과의 관계가 다른 국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장쩌민 이후 후진타오 주석까지 진행된 기업을 포함한 핵심 이해 집단의 흡수 정책을 전문가들은 '포섭전략(co-optation)'이라고 부름

- 1990년대부터 공산당에 의해 적극 추진된 권력, 지식, 자본 등의 지배연합 구축을 의미

- 특히 2000년부터 구체화된 민영기업가들의 공산당 포섭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민간기업가들이 공산당 지배를 적극 지지하는 계기가 마련됨

나. 부의 정치화

○ 기업의 비약적인 팽창과 공산당에 의한 부의 지배가 확대되자 중국식 권력 경쟁 혹은 투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 권력과 부의 유착 결과인 렌트 추구 행위가 두드러지면서 부패가 가시화됐고, 그것이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독특한 현상이 가시화됨

- 역사적으로 어떤 체제든 부패를 용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부패는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이 중국의 부패가 권력투쟁 도구로 활용되는 이유; 즉 정적의 부패를 적발하여 그들에게 공세를 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 보여주듯 개혁개방 이전의 권력투쟁 수단은 이데올로기 혹은 핵심 정책의 성패 여부였음;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경제와 부가 비약적으로 팽창한 후 중국의 권력투쟁에는 거의 예외 없이 부패에 대한 처벌이 수단으로 활용됨

- 부의 정치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셈

○ 부패 적발이 정적을 공격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자 부패 척결 운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다음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권력구도는 물론 경제 영역에도 큰 변화가 초래됨

-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정치스캔들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충칭 당서기의 실각과 처벌은 위의 현상을 잘 보여줌

- 이 사건 역시 문제의 발단은 돈이었음

- 2011년 11월 보시라이 및 그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와 깊은 금전 관계를 맺고 있었던 영국인 사업가 헤이우드(Neil Heywood) 죽음이 문제의 발단

- 2013년 보시라이는 재판을 거쳐 처벌됐는데, 죄목은 뇌물 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었음; 돈과 관련된 부패 행위가 죄목

의 핵심 내용인 셈

○ 사태는 보시라이라는 정치 거물의 뒷배경이었던 거대한 권력집단이 개입되는 대규모 정치 투쟁으로 번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권력구도 자체가 변하는 계기가 마련됨

- 2014년 보시라이의 정치적 배후였고 후진타오 시절 정법위 서기로서 최고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정치국상무위원 저우융캉(周永康)이 처벌됨

- 그의 죄목에도 예외 없이 돈 문제가 등장: '직무를 이용한 불법 사익 취득 및 뇌물 수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편의와 이익의 제공, 본인 포함 가족들의 다른 사람 재물 접수, 권력과 금품 활용 간통' 등

○ 이상을 통해 부와 권력의 연계 방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의 특혜 혹은 정책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대기업의 속성상, 위와 같은 권력 투쟁은 다음의 설명이 보여주듯 민영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5. 개인 기업 앤트그룹 사태의 본질

가. 민영 대기업의 소유권과 권력

○ 2018년 2월 중국 3위의 대규모 민영 보험회사인 안방보험(安邦保險)이 사실상 국유화되는 사건이 발생

- 안방보험은 당시 자산 규모가 3,160억 달러였고, 무려 58개 자회사를 거느린 초대형 금융그룹이었음

- 기업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였던 우샤오후이(吳小暉) 역시 경제사범으로 체포되어 18년 징역형에 처해짐

- 우샤오후이는 2004년 덩샤오핑의 외손녀 덩저루이(鄧卓芮)와 세 번째 결혼한 직후 안방보험을 설립했는데, 국유보험회사가 전부였던 당시 중국에서 최초의 민간 보험회사가 설립된 것은 매우 이례적; 엄청난 권력 배경이 존재함을 암시

- 흥미로운 점은 회장인 우샤오후이가 등기상 안방보험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실; 몇몇 불분명한 이름과 이들에 의해 통제되는 조개 사업 관련 기업의 계승자들이 등재되어 있었음

- 중국의 민영 대기업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인데, 그러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안방보험 이사회에는 중국 10대 혁명 원로인 천이(陳毅) 전 부총리의 아들 천샤오루(陳小魯)가 이사로 있었고(천샤오루 2018년 3월 급서),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아들 주윈라이(朱雲來)도 과거 등기이사였음; 롱용투(龍永圖) 전 상무부 부부장은 안방보험 창립 멤버

- 안방보험이 권력 실세들의 회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중국에 예상보다는 흔하다는 사실

○ 이상의 분석은 안방보험의 국유화가 권력구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암시

- 당국은 안방보험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졌다는 점, 안방보험과 같이 초대형 금융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 금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현실 등을 국유화 이유로 제시

-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는 거의 없음

- 대신 다음의 정치적 해석에 무게가 실림: "우회장 같은 사업 거물이 구속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부를 정치적 영향력 확장에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암시.... 그러므로 향후 국가의 정실주의 시스템에 기초 우회장과 같은 독립적인 거물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임" 2)

- 중국에서 흔히 통용되는 '바이쇼우타오(白手套 · 흰 장갑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제3자)' 라는 용어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안방보험과 우 회장이 몰락의 위기에 처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혁명 원로 자녀인 홍얼다이(紅二代)를 겨냥해 칼을 뽑아서인데, 역사학자인 장리판(章立凡)은 명보에 '안방보험의 (정부) 위탁 경영(사실상 국유화)을 통해 홍얼다이 세력 돈줄을 끊어 시 주석에게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고 평함" 3)

---

2) Jamil Anderlini, "Enduring suspicion weighs on capitalists in China," *Financial Times,* 1 March 2018.
3) 하현옥, "중국판 버핏 우샤오후이(안방보험 회장)의 몰락... 태자당 돈줄 끊기," 「중앙일보」 2018-02-26.

- 안방보험 사태는 외형상 중국 민영 대기업의 소유권과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돈과 권력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정치화되는 과정 역시 이를 통해 드러남

○ 2018년 3월에는 중국 석유회사 중 세 개의 거대 국유기업 다음으로 큰 회사인 민영 CEFC 그룹[화신(華信)그룹] 예젠밍(葉簡明) 회장이 구금된 후 정부가 회사를 흡수하는 사건이 발생

- 회장이 중국 인민군 전 해군사령관 예페이(葉飛)의 손자로서 태자당의 특징인 상당한 인맥의 소유자라는 사실, 고속 성장을 했다는 점, 국유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하는 사업 분야에서 민영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 등이 안방보험과 흡사

- 다음은 이를 처음 알린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의 보도: '화신의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건 상하이 군부 세력, 그러나 장쩌민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상하이방은 시주석의 최대 견제 세력, 양측의 대립이 화신그룹의 해체에 영향을 줌' 4)

○ 같은 시기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사모펀드 등 23개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밍톈(明天)그룹이 정부에 의해 강제 매각됐고, 그룹 총수 샤오젠화(肖建華)는 홍콩에서 실종된 후 뇌물 공여 및 금융 조작 협의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음5)

○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국에서 민영 대기업의 실체, 즉 권력과 기업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기업의 성장과 실패가 이들 구도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특히 대기업의 소유권은 자유시장경제의 그것과 비교 어떤 차이가 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추할 수 있음

○ 같은 논리를 앤트그룹의 상장 중단 사태에 대입해 보면 다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음

4) 이길성, "시진핑, 석유재벌 '화신'도 국영화... 상하이방 옥죄기,"「조선일보」2018-03-05; 김대기, "석유재벌 예젠밍 구금 정적 제거 고삐 죄는 시진핑,"「매일경제」2018-03-03.

5) Xie Yu, "China's battle plan against tycoons prompts Xiao Jianhua firms to sell US$23 billion of assets," *South China Morning Post,* 09 March, 2018; Choi Chi-kyu, "The big questions about missing tycoon: why and why now?" *South China Morning Post,* 20 February, 2017. "홍콩 빈과일보는 시 주석이 화신에너지를 비롯해 안방보험, 다롄완다, 하이난(海航)항공(HNA), 푸싱, 밍톈, 센추리 등 태자당과 연루된 7대 그룹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강동균, "시진핑 '태자당 재벌'에 칼날 화신에너지 경영권도 박탈,"「한국경제신문」2018-03-22.

나. 앤트 그룹, 총수 마윈(馬雲), 그리고 중국 정부

1) 앤트그룹의 위상

○ 앤트그룹의 총수 마윈(馬雲)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 2014년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알리페이를 다시 포장한 앤트파이낸셜을 출범시키며, 금융과 IT가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Finance/Technology) 산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됨(상장을 앞두고 앤트파이낸셜을 앤트그룹으로 개명)

○ 사업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상장 이전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았음

○ 무려 340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가 예정 일을 이틀 앞두고 전격 취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그 원인에 대해 온갖 추측과 분석이 난무

2) 상장 취소의 원인에 대한 경제적 설명

○ 당국은 전격적인 상장 취소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주요 이슈들(major issues) 때문' 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전부

○ 상장 취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초기 해석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마윈의 대정부 비판이 원인이었다는 것

-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금융서밋에서 마윈이 행한 다음의 연설이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곧 이어 당국의 상장 중단 조치가 떨어졌다는 설명: (앞에서 소개한 연설 내용을 다시 반복) "위대한 혁신가들은 감독 자체를 두려워하진 않지만, 뒤떨어진 감독은 무서워한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할 순 없다... 현재 중국 금융 시스템은 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기능의 부재가 문제다"

- 2020년 10월 24일 마윈의 와이탄금융서밋 연설 9일 후 당국이 마윈을 소환했고, 11일 뒤(11월 3일) 앤트그룹 상장을 유예시켰음; 이 결정 하루 전인 11월 2일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인 소액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 당시 사건의 연계성을 알 수 있는바, 마윈의 대정부 비판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주장의 근거(content analysis)

- 즉 앤트그룹은 전부터 당국의 관심 대상이었는데, 마윈의 대정부 비판 연설이 있자 이를 빌미로 그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분석

○ 그러면 앤트그룹이 왜 당국의 요주의 감시 대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음

- 마윈은 앤트그룹(앤트파이낸스) 약진 이전에 이미 알리페이 등을 통해 첨단의 금융시스템을 도입했고, 은행, 신용카드 대출 등 전 소비 금융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날이 발전된 IT 금융기법을 마윈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자, 새로운 금융 및 관련 행태, 그리고 이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통제가 원칙인 당국의 입장과 마윈의 사업 내용과 행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설명

- 결국 앤트그룹에 대한 경각심을 당국이 갖고 있던 참에 마윈의 대정부 비판 발언이 있자 이를 빌미로 앤트그룹에 공세를 취했다는 해석

- 하지만 이런 설명은 다음의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마윈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와이탄금융서밋 연설에서 정부를 비판했을까? 마윈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인물일까?

○ 상하이 및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국유기업 비중이 2008년 80%였으나 2020년에는 40%로 하락한 상황이 보여주듯, 대형 민영기업의 가시적인 약진은 중국정부의 위기의식을 부추겼고, 그 결과 시진핑 시절부터 큰 민영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

-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조롱경제론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

-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필요한 상황

3) 정치적 해석

○ 앤트그룹 사태 이전, 마윈 성공의 발판이었던 알리바바와 관련 마윈은 2018년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음

- “국가가 요구하면 나는 언제고 회사(알리바바 등)를 기꺼이 국가에 넘기겠다”

- 실제로 2019년 마윈은 알리바바 회장직에서 사임

-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소개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바이두 같은 인터넷 개인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현대경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데이터)를 통제한다.” 6) 바로 이것이 중국 당국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주민 자료의 거대한 통제 및 운영과 같은 일정 범위를 벗어난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당국의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

-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 위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뒤를 이음: “당국은 마윈에게 마윈의 금융 제국이 그 동안 모은 약 10억 명에 달하는 중국 소비자의 신용 및 신상 정보를 요구했지만 마윈이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당국이 앤트그룹 상장 취소라는 보복을 가했다는 것” 7)

○ 앞서 소개한 권력과 돈의 결탁 때문에 발생하는 권력투쟁적 요소가 앤트그룹에 대한 공세로 나타났다는 다음과 같은 설득력 있는 해석도 존재

- “일각에선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출신인 마윈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대부인 상하이방(上海幇 · 상하이 출신 당정 권력그룹)과 친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 계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분석이 존재; 2014년 미국 뉴욕증시에 알리바바가 상장하면서 공개한 주주명단에 장쩌민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게 근거; 시 주석은 집권 후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 등 장쩌민 계를 대거 숙청” 8)

- 다음 역시 맥락은 비슷한데, 내용은 더욱 구체적: “시진핑과 그의 파워 그룹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 집단(주로 샹하이방 계열)이 (앤트그룹에 많은 지분을 가진 결과) IPO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이 이 파워 그룹의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이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 9)

4) 구조적 분석

○ 앤트그룹 사태에는 중국경제 특유의 구조적인 특징이 묻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

---

6) Anderlini, “Enduring suspicion weighs on capitalists in China.”
7) Lingling Wei, “Chinese Regulators Try to Get Jack Ma’s Ant Group to Share Consumer Data,” *Wall Street Journal,* January 5, 2021.
8) 전수진, “벼르던 中, 마윈이 뺨 때렸다...‘엔트’ 상장중단의 전말, 증거금고 환불,” 「중앙일보」 2020-11-04.
9) Lingling Wei, “China Blocked Jack Ma’s Ant IPO After Investigation Revealed Likely Beneficiaries,”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16, 2021.

○ 앞서 자세히 소개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중국경제의 가장 큰 특징인바, 여기서 핵심은 시장과 소유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임: “경제 활성화와 운영을 새와 새장에 비유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장의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새장이 없으면 새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장인 계획이라는 큰 지도하에서 개인 경제활성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는 조롱경제론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논리를 제공

○ 이 원칙을 적용하면 새장을 뚫고 나오는 어떤 경제 행위, 즉 새장을 압박하는 거대 기업,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개인의 경제 행위, 그리고 과도한 소유권 등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 따라서 민영기업이 지나치게 커져서 새장을 압박하면 그 기업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됨

○ 조대방소 원칙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대형 기업은 국가 소유가 원칙인바, 그러므로 거대 기업은 국가가 접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조대방소 원칙이 뒷받침하고 있는 셈

- 따라서 안방보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 최초의 민영 보험회사인 안방보험은 애초 허가가 나지 않았어야 했지만 권력과 부가 결탁하면서 조대방소 원칙을 위반하며 탄생할 수 있었고, 급기야 거대한 자금과 권력의 유착 때문에 새장을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가가 이 회사를 흡수

○ 이상의 구조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전해줌

- 우선 기업과 국가 관계에서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칙이 드러남

- 시장경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상징하는 민영기업의 약진과 개인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과 관련 중국 당국의 경제운영 방식에는 과거와 비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1980-90년대 확정된 기업에 대한 원칙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

- 이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인데, 그 속성을 정확히 인지해야 중국경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앤트그룹과 같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음

- 중국경제의 특징과 운영 원리는 외부에서 관찰 혹은 주장하는 것과 비교 차이가 남: 앤트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중국은 나름의 원칙과 특성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 셈

- 따라서 위의 원칙이 살아있는 한 앤트그룹 사태와 비슷한 사건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최근 분석 역시 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

- “이번 여름 중국 공산당은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개인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과거 기준으로 개인기업의 행동과 관련 간과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인기업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국 공산당은 확실히 하고 있음”

- “당연히 국유기업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중국 전문가 블란세트(Jude Blancettee)는 다음과 같이 진단: 「중국은 통제의 또 다른 사이클에 들어섰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10)

10) Ryan McMorrow and Sun Yu, “The Chinese Billionaire who got too big,” *Financial Times,* 17-18 April 2021.

6. 결 어: 앤트그룹 사태와 중국경제정치에 대한 재인식

○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한 개인 기업의 일로 간주할 수도 있는 앤트그룹 사태를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그것이 중국경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

○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행위와 소유권의 범위, 기업의 형태와 자율권, 그리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 등에 대한 원칙이 정립돼야 하는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오래 전부터 중국은 나름의 원칙을 마련했고, 그것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조롱경제론, 조대방소 원칙, 그리고 주식제 전환 조치 시 주식에 대한 해석 등)

○ 그럼에도 위의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제도이고,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임

- 즉 서구식 시장경제는 물론 전통적인 공산주의와도 다른 제삼의 제도인 셈

○ 결국 공산당의 지배력 강화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에 맞춰 민영 대기업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치적 질문도 가능

- 상기 논제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가 보여주듯 중국경제정치의 맨 위에는 공산당 지배력의 유지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리잡고 있음

- 조롱경제론, 조대방소 원칙, 그리고 주식제 전환 조치 시 주식에 대한 해석 등도 사실은 하부구조, 즉 시장원리의 도입으로 불가피해지는 경제관계의 변화가 상부구조, 즉 기존 정치질서를 흔드는 상황을 억제하는 방안들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경제에 대한 정치 우위의 원칙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자리 잡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

- 그런 시각으로 앤트그룹 사태를 이해하는 것 역시 사안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접근 방법임

○ 기업에 대한 논의도 결국 같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경제의 기본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와 기업 관계를 납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앤트그룹 사태에 대한 설명도 어려워짐.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